

광주 관광레저 복합타운 추진 어떻게



330만㎡ 규모의 관광·레저복합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광주시 서구 서창동 절골마을 일대. 광주시는 민자·국비·개발이익금 등 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티위, 오페라하우스, 국제민속·음식촌, 공예산업클러스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최현석기자 Choi@kwangju.co.kr

영산강 권역에 신성장 거점 육성

관광시설·자연자원 연계 전남·광주 상생 발전

추진위 구성...지방선거 이전까지 사업자 선정

광주시는 2010년 F1대회, 세계박람회,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광주·전남에서 치러지는 국제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관광·레저복합타운(이하 복합타운)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전남의 자연자원은 매력적이지만, 이를 기반삼아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의 창출 구조가 허약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광주시는 애초 농구장을 건립하고 그 주변을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포스코건설의 사업제안 포기로 농구장 건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와는 별개로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방침이다.

◇복합타운 조성사업 의미=광주시가 지역내 대표적인 미개발지에 해당되는 서구 서창동 일대를 복합타운 예정지로 선정한 것은, 광주의 중심지와 가까우면서 이 지역이 나주

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광주를 잇는 새로운 개발 축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영산강 권역의 '부흥'을 이끌어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의 상징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타운이 전남의 자연자원과 광주의 관광기반시설을 연계한 지역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산업은 21세기 미래형 산업으로, 서비스산업 및 건설업 등과의 연계효과가 높다"며 "지금처럼 단순히 보고 스쳐가는 관광에만 머무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체험하고, 즐기며, 머무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복합타운 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농구장은, 광주시가 향후 별도의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광주야구장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야구장의 건립 방식 및 재원·장소 등을 결정

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본구상에서는 제외됐다.

◇추진 일정=광주시가 다음달 22일까지 '사업제안'과 '자유제안' 등 2개 부문에 대해 공모에 나선 것은, 민간자본을 투자할 사업자와 일반시민 및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장 건립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지난 10일 도시계획·건축·전문가, 시민단체·상공회의소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관광산업육성추진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 위원회가 최근까지 5~6차례 회의를 갖고 기본구상을 다듬었으며, 이를 토대로 다시 제안을 받기로 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31일 까지 우수 제안이 선정돼 '광주 관광·레저복합타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곧 민간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조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사업비를 각각 민간자본과 국비, 개발이익금 등으로 총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그 중 상당액은 민간자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사업자의 참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박광태 시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되

도록 6월2일 지방선거 이전에 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창동 211번지 일원은=복합타운이 조성될 광주시 서구 서창동 211번지 일대는 광주의 '숨겨놓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고도제한 구역이어서 그동안 개발이 억제돼왔지만, 제2순환도로와 제3순환도로(2019년 완공 예정)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2017년 완공 예정)가 부지 중간을 통관하고 있어서다. 또 서구 상무지구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의 연계지역으로, 바로 앞에 영산강이 흐르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기도 하다. 자연녹지지역인 이 일대의 땅 값은 지난 1월1일 현재 1㎡당 4만9천원에 불과해 개발이익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전망이다.

관광산업육성추진위원회 한 위원은 "지리적인 위치나 토지이용 측면을 고려할 때 대상지의 선정은 오랜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광주·전남을 잇는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개발 조건이 뛰어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공천 현금' 수사 불똥 초긴장

현역 국회의원 소환... '몸통' 밝혀질때 지방선거 악재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 의원 비례대표 '공천 현금'에 대한 검찰수사(본보 1월30일자 3면 보도)가 현역 국회의원 소환조사로 이어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 현금 '불똥'이 민주당과 지역정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 원씩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도 전남도의원과 박모 전 전남도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8일 당시 민주당 도당 위원장인 최인기 국회의원을 소환

해 조사하는 등 '공천 현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2명의 전·현직 도의원들을 상대로 6억 원이나 되는 '공천 현금'을 누구에게 건넸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당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천 라인'에 대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 분위기 뒷에 민주당은 '공천현

금' 불똥이 이번 지방선거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애초 최인기 의원도 검찰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력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언론 등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애를 썼던 점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언론이 검찰 소환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공천 현금'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검찰이 공천 현금의 몸통을 밝혀낼 경우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와중에서 '돈 공천'의 주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

/최권일·하태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장 4월 11일께 경선
시민배심원-국민경선 이견

광주 국회의원들 논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오는 4월11일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청장 후보 경선은 4월3~4일 또는 4월10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시장 경선 방법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시민배심원제와 국민참여경선을 놓고 의견이 서로 엇갈려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2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앙당에 건의한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22일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다면,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구성 등과 기초자치단체장 이하 후보자 경선방식은 공심위에 일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박주신 최고위원(동구)을 제외

가 도입되고, 김 위원장의 말대로 압축된 후보들을 상대로 4월 초 토론회와 경선을 하게 된다면, 컷오프를 위한 시민배심원 경선은 3월 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국회의원들은 구청장 이하 선출직의 공천 방식은 앞으로 구성될 시장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이 방식에 따라 4월3~4일 또는 4월10일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이 치열한 광주, 전남, 서울, 경기, 인천 가운데서도 광주는 상징성이 크다 보니 토론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참여경선을 선호하는 의견과 중앙당이 아심 차게 들고 나온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충분하게 토론하면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이하 후보자 경선방식을 향후 구성될 공심위에 일임키로 했으며, 위원장을 김동철 시

당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공심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위원장 7명과 여성 4명을 포함한 외부인

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과 이윤정 남구지역위원장, 박금자 광주시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강운태·조영택 의원 등은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했지만, 강기정·이용섭 의원 등은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도입을 주장,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장 경선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했으나 입장차이가 커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당 경선기획단이 잠정 결정한 3월28일에 경선 할 경우 4월2일부터 가능한 언론사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 여부 때문에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컷오프로 압축된 후보

를 대상으로 1~2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에 경선을 위탁할 수 있는 시한(4월11일)에 맞춰 경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광주시장 후보 경선방법에 시민배심원경선을 통한 컷오프 제도

사 6명이 참여하며, 광주시장 후보인 강운태·이용섭 의원은 제외하는 대신 이들이 추천한 인사 2명을 포함,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강기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외부인사 2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경선을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당 부위원장, 상무위원 등 당내 인사와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경선 불복 후보자를 위한 재심위는 7명으로 꾸려진다. 민주당 시당은 다음주 종각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김효석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 이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공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심위는 오는 24일께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이운석·김영록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갑원 의원, 재심위원회는 우윤근 의원, 비례대표 심사위원회는 이나연 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최인기 의원 등이 각각 맡게 된다.

/임동욱·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0학년도 광주 바이블칼리지 신입생 모집

한국 신학교 최초 정규 커리큘럼에 영성자유음악파 목회 개설!

마지막시대의 마지막 부르심!



▶ 광주바이블칼리지

▶ 광주바이블칼리지